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2025년 3월 27일(목)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지역경제·도시재생

다같이 잘사는 기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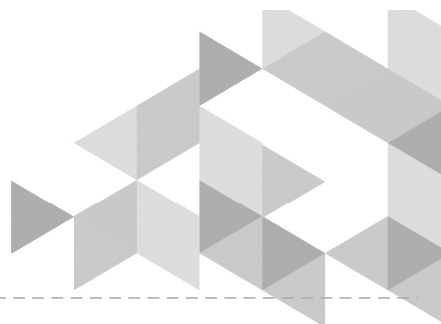
주최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CONTENTS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 인사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i
복기왕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iii

■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vii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viii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x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xii

■ 패널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인재 정책 제안	1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대표	
2. 민주주의 지역경제 전략으로서 CWB(Community Wealth Building)와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가능성	7
이미경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CONTENTS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 3.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13
박종배 사회적기업 (주)플라워림프 대표
- 4. 복합위기 대응의 최전선, 마을에 대한 제도적 지원 19
서보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5. '인구변화'가 가져온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23
안정희 (사)균형성장혁신 이사장
- 6.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제안 31
윤요왕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계엄 이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너무도 힘들어졌습니다.

계엄 이전 100을 웃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2월 3일 이후 88.2로 급락했습니다. 일상의 불안 때문에 국민들은 지갑을 닫아 계엄 직후 신용카드 사용액은 일평균 1,8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는 치솟아 최근 3개월 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2%를 넘었습니다. 지난 2월 들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22만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가 필요합니다.

기본사회는 지역에도 양질의 의료·돌봄·주거·교통 등의 기본서비스를 공급해 전국 어디서든 차별 없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농민과 자영업자, 청년 등 다양한 집단에 적절한 소득을 지원해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지원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는 기본사회의 핵심입니다.

돌봄과 의료, 에너지전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등 그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미뤄둔 문제, 어려워 손대지 못했던 문제를 책임져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국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기본사회의 핵심전략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정책적 지원 방안, 풀어야 할 규제나 정비해야 할 제도를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관한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을 듣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집중화 정책으로 지역을 외면했습니다. 첨단산업 투자를 집중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강남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을 자극하고, 도시재생이 아닌 도시개발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인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6월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의 60%가량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대로면 앞으로 지방은 사람이 살지 않고 빈집만 무성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청년과 일자리가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다시 살린다면 어디서든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연구원과 함께 오늘 경청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패널로 나서주신 여섯 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새로운 전환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분들께서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기탄 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민주연구원장 이 한 주

인사말



복기왕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주제로 열리는 세 번째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경청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간담회를 함께 열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간담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와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가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본사회는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고 미래입니다. 2023년 8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창한 기본사회 구상을 정당의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사회 실현 구상의 핵심에는 ‘사회적경제’의 사회문제 접근방식과 문제해결능력, 기본작동원리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이윤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재투자하는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경제를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경제’라고 부르고, ‘사회연대경제’라고도 부릅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같은 정책적 이슈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나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UN과 OECD 등 국제사회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각 회원국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즉, 사회적경제의 문제해결능력이 양극화와 저출생 문제,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검증해온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부문에서 사회적경제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사는 마을과 도시 등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을 살리고 또 바꾸는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어떻게 더 키워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오늘 간담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에 깊은 소신을 가진 국회의 일꾼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해주신 다양한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복 기 왕**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과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회복지특별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 문화, 교육, 정보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격차는 날로 확대되어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7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와 민생 위기, 내란의 피해까지,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간다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돌봄과 의료, 재생에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사회를 실현하기에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합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토론회를 경청하여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담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재영*

축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님, 복기왕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도시재생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개발 중심 정책만을 고집했습니다. 지역 자산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대신 오히려 개발 사업성과 단기 이익만 앞세웠습니다.

다시 사회적경제에서 해법과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주민 중심 지역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성장이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균형발전과 함께 잘 사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찬 대

축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입니다.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청년고용률은 서울보다 최대 15%포인트 이상 낮았고,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인 지역 대책은 없이, ‘지방시대’라는 공염불만 외쳐왔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외면했고, 도시재생은 도외시 한 채 단편적인 재개발 위주 정책들에 치중했습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까지 수도권으로 몰아주면서, 일극체제로의 쏠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문화, 교통 등을 생애주기별로 뒷받침할 과감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등의 역할도 주요하게 요구됩니다.

지역 역사와 문화를 살린 마을기업,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빈집 정비 등으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이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것으로 압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그리고 패널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주당도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 성 준**

축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먼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복기왕 위원장님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은, 대한민국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역은 단순한 행정단위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이 녹아 있는 공간이며, 우리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터전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활력 없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은 곧 공동체이며, 공동체의 회복은 곧 국가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도시의 확장과 성장 중심의 개발에 치우치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도시를 되살리고, 지역을 재생하는 새로운 접근이 절실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연계되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물론,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민생회복지원금의 디지털화, 유통 인프라 개선, 지자체 간 협업모델 확산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자리가 “함께 만들 기본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대한민국,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 정 훈

축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 맹성규입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복기왕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의 인프라와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자라온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지역에 대한 투자도 줄어드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쇠퇴해 가는 도시를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활력 있게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간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지방소멸 문제는 외면되었습니다. 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쇠퇴한 도시는 결코 되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인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와 주민 공동체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맹 성 규**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인재 정책 제안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대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인재 정책 제언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대표

□ 제언 배경

- “서울을 원하고 이동하는 청년세대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방소멸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저출산, 지역이탈 등 핵심 지표는 청년들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문제해결 방식이 ‘떠난 청년을 돌아오게 하는 것’, ‘연애하고 결혼하게 하는 것’, ‘출산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 등으로 아주 1차원적인 해결책만 진행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는 것, 지방을 떠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방도시 보다 서울이 더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도시가 해야 할 역할은 서울보다 좋은 포인트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실행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청년 혼자의 힘으로 서울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멘토리는 지방을 살리려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물음 때문에 서울 밖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적만 하더라도 한강드림이 이뤄졌고, 대학에 갔을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이 보장되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것이 어느정도 기반을 마련 되어있었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불가능합니다. 미디어 속에서 ‘서울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강뷰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서울의 아파트한채, 대기업, 중산층 정도의 소비력을 기본값으로 만들어서, 이런 ‘서울사람’을 꿈꾸고 청년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의 경제력과 인프라가 지원되지 않으면 자수성가가 불가능한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 모든 청소년들이 서울의 대학과 서울 사람만을 꿈꾸게 하는 획일화된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사회는 95%의 불행한 청년을 만드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아닌 재능을 찾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것, 이 두가지가 청소년시기에

충분히 고민되어야하고, 이를 통해 서울 밖의 기회가 늘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다양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자영업과 서비스, 공장, 농업 등을 하대하는 것이 나아지지 않으면 ‘육체노동’이 중심이 되는 1차산업, 제조업 등이 몰려있는 지방도시는 절대 청년들에게 좋은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 안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제일 싫어합니다. (힘든 일은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싫었겠지요.) 이런 인식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심어서 키웠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등급을 매기지 않고, 각자가 행복 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위해서 정말 온 국민이 인식 변화에 동참을 하지 않는 이상 지방에서의 삶은 활동가적인 사람들을 위한 대안적인 삶이나 도시보다 부족한 삶의 태두리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럼 결국 지방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은 답중 한가지가 아닐까?
계속 줄어드는 청년 인구는 사실 경제력도 빈약해 받을 것 보다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226개 시군구에 고루 배치되어야 할 이유도 없기에,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베이비부머, 은퇴자, 이민자 등 다양한 대상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이 전략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곳에 쓰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을 활용하는 대상으로 하기보다 인재로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 제안

- RISE 체계를 활용한 지방도시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통일된 교육 정책
- 지방대학 대상 지역자원을 활용한 적정기술 R&D 사업

□ 제안 내용

-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교육 체계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아쉬운 점은 ‘장기적 전략’의 부재입니다.
다행히도 RISE 체계를 시작으로 지방소재 대학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중앙에서 큰 인재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고 지방에서는 각 지역별 특화 전략을 마련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수급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의 대학이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스페인 같은 곳은 지방도시에 대학이 3,4개 밖에 안되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R&D의 80%이상을 지역 대학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로지 첨단산업뿐입니다. 그러다보니 강원도에서도 수소자동차나 우주산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방의 자원을 활용한 기초연구나 다양한 산업R&D는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연계된 산업 R&D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사과로 유명한 예산은 사과 활용 증류주 관련 기술 개발처럼) 지역에서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연구여야 합니다.

- 오늘의 주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였는데, 청년이라는 카테고리가 여기에 담겨있어 제가 초대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기를 맞이한 조직은 ‘전략’을 수립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정치인, 교수, 공무원 중심의 구조로 지방도시의 위기를 해결하다보니 현실성 없는 전략만 가득합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자리도 수천번 있었고, 수만건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테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지방도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며 느낀 점은 기성세대의 장벽이 훨씬 더 높고, 기득권의 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역시 기성세대와 기득권의 것 이었습니다. 항상 사과를 하는 어른들은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잘못된 부분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민주주의 지역경제 전략으로서 CWB(Community Wealth Building)와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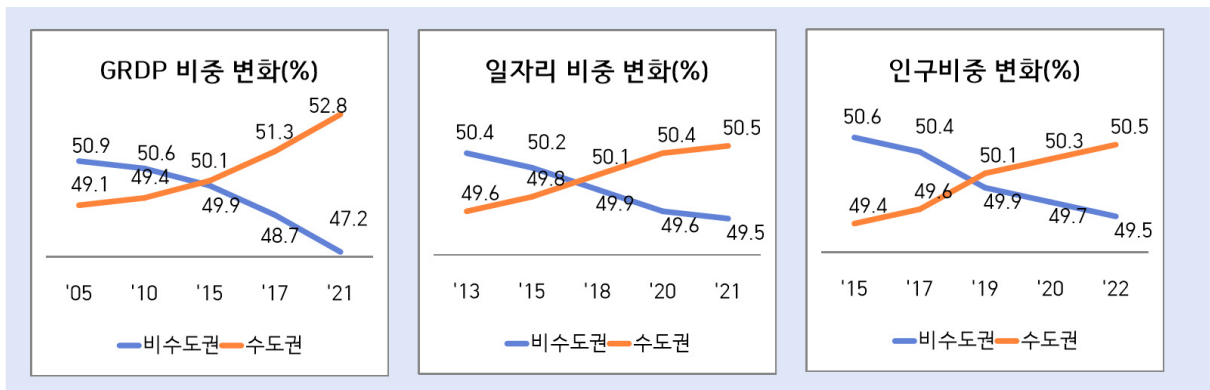
이미경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민주주의 지역경제 전략으로서 CWB(Community Wealth Building)와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가능성

이미경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1. 기본사회의 과제 : 지역 간, 지역 내 격차 해소



[그림1]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력 변화

출처: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 **인구와 성장산업의 수도권 쏠림** : 우리나라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22), 1,000대 기업 본사의 75%(’21), 성장잠재력이 높은 R&D 투자기업의 69%, 100억 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92.5%, 매출 1천억 원 이상 벤처기업의 62.6%가 수도권에 집중됨.
- **점점 더 벌어지는 격차** : 한국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8.2%에서 2005년 48.9%로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했으나 2015년 수도권의 GRDP 비중이 비수도권을 역전(50.1%)한 후 2017년 51.3%, 2021년 52.8%로 뚝. 2010년 수도권-비수도권의 GRDP 격차는 1.2%p였지만 2021년에는 5.6%p로 크게 벌어짐

2. CWB(Community Wealth Building),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지역경제

1) CWB란?

- 누출을 줄여 투입된 물이 욕조에 더 많이 머물러 순환하게 하는 것_필립 B. 와이먼/영국 센트럴랭커셔대 교수
- 지역사회 부를 증대시켜 다시 지역사회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는 로컬 경제전략으로
지역사회의 부가 일자리, 소유권, 토지와 자산을 통해 지역공동체로 재이동하도록 설계,
목표는 건강하고 민주적인 경제와 주민들의 좋은 삶_사라 롱랜스/영국 지역경제전략센터
(CLES)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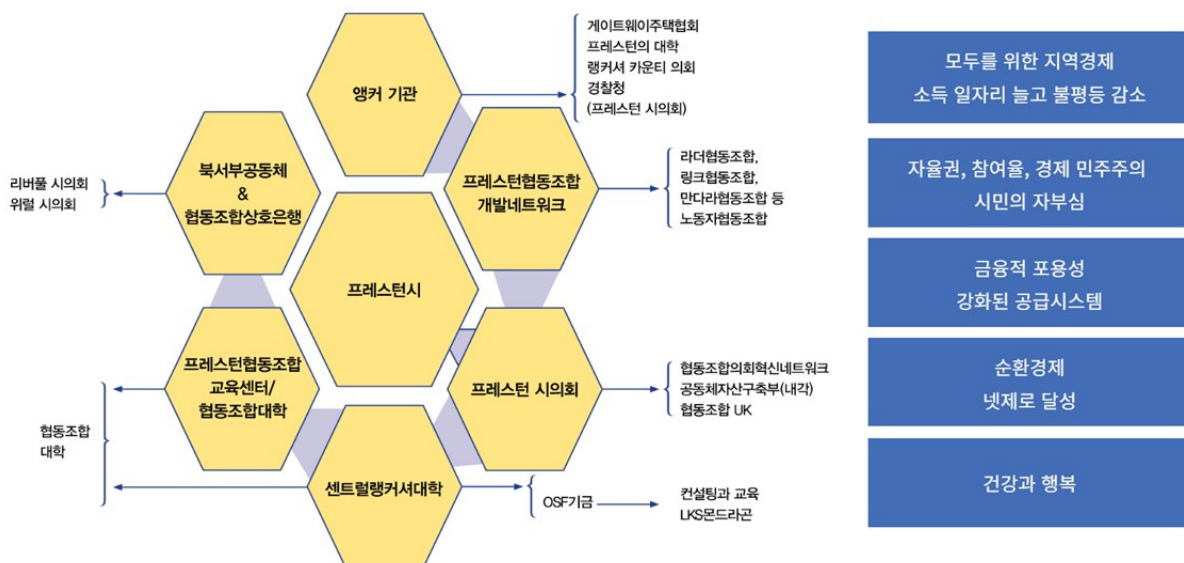
2) 클리블랜드 모델 : 지역 내 빈곤과 불평등 해소

- 철강산업(록펠러) 쇠락으로 1970년대 빈곤율 40%,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 클리블랜드 재단 주축으로 도시 중앙의 부유한 섬(종합병원 2곳 대학 1곳)이 주변 7곳의 문제를 해결하는 앵커로 변신
- 노동자 소유 기업 에버그린협동조합 설립



3) 프레스턴 모델 : 지방정부 주도의 CWB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10년간의 노력”

- 진보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 시정부(의회)와 지역 앵커들의 지출(역외유출) 분석 > '진보적 조달'로 전환 >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함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주체로 호명
-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 지역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및 성장 지원_협동조합 개발 네트워크, 협동조합대학 등 설립
-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ies) : 공공자산, 공동체 소유, 도시재생
- 지역금융(Local Finance) : 북서부공동체&협동조합상호은행 설립(서민금융, 사회적경제기금)
- 공정한 노동(Fair Work) : 생활임금 지급 의무화
- 성과 : 2013년부터 5년만에 프레스턴 내 구매 5% > 18.2%, 랭커셔주 내 39% > 79.2%



4) 스코틀랜드 모델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CWB 활용

-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웰빙경제(Wellbeing Economy) 실현의 유용한 전략(도구)으로서 CWB 채택
- 자치정부는 법/제도화에 주력하는 한편 기초지자체 5곳 시범사업 시행 및 성과 측정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CWB 핵심요소(기동)와 세부 시행방안 수립 유도
- 국가성과프레임워크(NPF)와 웰빙경제 모니터 등 마련해 성과를 측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3. 사회연대경제, 새롭고 더 큰 프레임을 짜자

- 1) 보완이 아닌 대안, 나아가 대체 경제 모델로서 CWB와 사회연대경제
 - 2) 고령화와 지방소멸위험, 돌봄수요 증대 > 기업과 공공이 해결할 수 없는 상품/서비스 영역 확대
 - 공공의 적극적 구매와 확산을 통한 복지비용 저감 및 효율화
 - 3) 로컬벤처 창업 활성화와 성장 촉진 >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만들기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성장 교육 및 컨설팅(멘토리!)
- * 참고 : 강원 고성외 동해형씨와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이야기

4. 민주당 정책과 CWB

- 1) 공동체 기능을 강화한 '지역화폐 3.0
- 2)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박종배 사회적기업 (주)플라워림프 대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박종배 사회적기업 (주)플라워럼프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원예활동을 통해 사람과 환경을 회복시키자”는 미션으로 사회적기업 플라워럼프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사회적경제기업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플라워럼프 소개 - 화훼문화의 불균형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로

플라워럼프는 2018년 11월, 강원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화훼문화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화훼원예문화는 대체로 소득과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발달해왔지만, 강원도는 인구와 자원의 분산으로 인해 문화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저희는 강원도 전역을 돌며 화훼 문화를 전파해 왔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대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원예 키트를 개발, 전국의 복지기관과 학교, 지자체 등에 납품해왔습니다.

이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폐자원 활용 사업으로 확장하여, 폐낙엽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에 착수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서울지사를 설립, 사업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제도적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

(1) 사회적경제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적 설계 필요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첫 번째 창업’의 기회가 아닌,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이전에는 화훼유통업에 종사하며, 식물을 ‘수익의 수단’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식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으로 관점을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일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기존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30~40대 중장년층이 사회적경제에 진입해 성과를 내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인 강원의료사회, 온세까세로, 갈거협동조합, 위드커문, 원주상회 등도 모두 이러한 경로로 발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대상의 체계적 교육 및 전환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재도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정의 인식 개선과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기업을 단지 ‘복지성 일자리 제공자’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정도로 바라보는 인식은 구시대적 시각입니다.

플라워림프가 위치한 원주 강원혁신도시에는 13개 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협업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이벤트성 협업에 그치며 실질적 연계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부재와도 연결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축소로 인해 자생 기반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저희도 시장규모가 큰 서울에 지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역 핵심 경제 전략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적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권한 강화

현행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는 대부분 소상공인 정책 부서와 혼합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해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의 신설 또는 기능 강화, 나아가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3. 입법·제도 개선 및 공약 제안

(1) SVI 기반 사회성과 측정의 실질적 보상 필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지표인 **SVI(Social Value Index)**는 일부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주는 수준에 그치며, 실제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측정 과정에는 기업의 상당한 시간과 자원 투입이 요구됩니다.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성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 예컨대 현금성 보상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erformance Incentive)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직접 보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PC는 지난 10년간 많은 기업을 지원했지만, 현재 종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가점을 주는 ‘참여 유도형’이 아니라, 성과 기반의 보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보완적 복지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이제 정책과 제도도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의 인식 개선, 제도적 보완, 그리고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중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복합위기 대응의 최전선, 마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서보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복합위기 대응의 최전선, 마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서보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정책 담론이 아니라 정치 담론으로서 ‘기본사회’는 ‘왜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직관적 대답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함.
- ‘왜 필요한가’의 차원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문제 진단을 넘어, 지구적 복합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 전환 전략, 미래 전략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산업(일자리)/먹거리/건물/교통수단의 전환,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 적응 체제로의 전환, 빈발할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생명 안전 시스템의 전환, AI·로봇 등 기술변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중심 사회로의 전환, 총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적응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위기 극복 전략으로서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하위 담론 구축 필요
- ‘무엇이 필요한가’의 차원에서, 복합위기 대응 한국 사회 미래 전략으로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안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551)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911)
 - 「지방자치법 개정안」(양부남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08107)(이해식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12)
- 현재 복합 위기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영향은 광범위하며 효과는 복합적이지만 충격의 양상은 국지적인 특성을 지님.
- 예컨대, 지난주부터 영남권 일대 곳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 1차 진화에 성공하더라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며, 더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산불의 근본 원인인 한 향후 대형산불이 빈발하는 일상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 산불의 예방, 산불 발생 시 1차 구제, 진화 이후 해당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의 모든 과정에서 공적 기구(중앙-지방정부 등)의 지원 외에 인접 마을 단위 주민들의 네트워크와 지원은 중요할 수밖에 없음.
- 최근 여름-가을 폭우 피해도 마찬가지 양상임. 2022년 강남역 침수와 신림동 폭우, 2023년 오송 참사 등은 119 신고 후 소방차나 긴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심각한 피해가 이미 발생, 과거에 마련된 공적 재난구제 시스템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적 상황.
-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마스크 공급, 사회적 격리 시 일상생활 지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이전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단위 주민단체들의 활동이 1차 구제선 역할을 했음.
-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당시 ‘바로고 속초 허브’ 라이더들의 자발적 구제 활동이 있었고,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때 이웃 주민들의 탈출 지원이 있었음.
- 마을공동체는 급격한 산업전환 사회에서 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고(전국의 마을기업), 고령사회 대비 ‘노-노 케어’ 등 마을 돌봄 모델을 만들어왔으며,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모델을 창출하고 있고(예: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폭우나 산불 등 기후재난 대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예: 남양주시 진접읍 재난안전네트워크, 공양시 재난안전보안관 및 자율방재단 등)
-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 전략, 고령사회 대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마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핵심 기본 인프라로 이미 작동하고 있음.
-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줄 수 없는 시대, ‘정부는 멀고 이웃은 가까운’ 사회에서, 국가적 재난 대응과 성장 시스템 구축 계획에 마을은 기본 인프라로 위치지워져야 하며, 제도로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성장시켜야 함.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인구변화’가 가져온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안정희 (사)균형성장혁신 이사장



‘인구변화’가 가져온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안정희 (사)균형성장혁신 이사장

I. 들어가며 - ‘인구변화’가 가져온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이미 1980년대 미국, 영국 및 당시 선진국, 그리고 1990년대 일본, 이후 2011년 이후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는 인구의 감소’라 할 수 있다.

인구감소의 주요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산업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하에서의 ’가치 및 대한민국 인구의 생활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인구의 증가와 감소는 국가의 경쟁력을 성장·침체를 가져오고, 그 인구의 변화추이에 따라 2050년 전후에는 ‘현시점 출생률이 높은 국가(인도, 베트남,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및 멕시코 및 현재의 후발 경제개발국가 등이라 주장하고자 함)들이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규모화를 통해 대한민국 등의 OECD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 예측의 중심에는 ‘인구 증가’이며,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이민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단 30년 안에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변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경제전문가들은 충분히 예측할 것이라 본다.

이에 ‘기본사회’를 위해서는 ‘기존의 각 중앙부처 및 정부와 사회 각 부문이 진행하는 모든 정책에 대한 개별적 논의와 동시에 ’국가 정책 총괄자(대통령)가 ‘통합적인 균형성장과 균형발전 정책’을 정책목표로 ‘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20년 정책플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도시재생혁신

1. 25년 차 마을만들기 기반의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과 실천하는 활동가로서 바라본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현황_도시재생 관점에서_’

대한민국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는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인들에게 수백 년간 이어진 ‘공동체와 지역, 두레 등의 협업 및 마을공동체 경제’라는 마을과 마을 단위에서의 공동체 경제로부터 이어진 사회적 공동체 정신은 대한민국 산업화 시기에 ‘먹고 잠자고 성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회적 1순위 가치’에 맞히는 듯하였으나, ‘노동과 학습 그리고 일정 수준의 사회적·국가적 경제생활 유지’ 등이 확보된 이후 일부 노동권과 빈민·사회약자 층의 활동을 넘어 다시 일상에서 정책에서 ‘사회복지·돌봄, 평생학습 나눔’이라는 보편적 공동체와 ‘사회적경제·마을(농촌·어촌)만들기’ 등의 일부 보다 전문적이거나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변화가 이어졌다.

2014년부터는 ‘도시, 부동산 개발의 단점’ 및 과거와 달리 신규 도심의 개발로 인해 그 중심지 역할을 다한 원도심과 마을 지역들의 침체로 인한 원도심의 회복을 위한 ‘재정비·재개발·재건축의 붐’이 일어났으나 2018년도까지 수익성과 사업성이 낮은 대부분 도시와 지역들은 ‘재정비사업이 중단’되고 이후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영국, 일본 일부 유럽 도시 모델’을 국내 정책으로 도입하면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시점 약 644개 지역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확대 정책 보다는, 기존의 선정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및 완료라는 관리형 사업정책으로 전환 진행 중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와 원도심해결을 위한 도시재생도 ‘인구변화’가 주요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2. 마을만들기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그리고 도시재생은 명칭과 범위만 다를뿐 고 김대중·고 노무현·박근혜·문재인·현 정부 등의 역대 정부가 지속한 정책임.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경제·도시재생’이 국내에서는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문광부, 복지부, 노동부 및 기타 중앙부처 유 사업 등’으로 분리되어 진행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원래 ‘공동체’라는 안에 ‘마을과 지역의 공동체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사회적경제와 지역경제·시장경제’ 그리고 ‘공동체 시민 자본의 융합을 통한 통합적이 때로는 전문 지역특화 영역을 통한 지속되는 모델’임에도 좋은 정책사례를 중앙부처마다 실천하는 것에는 적극 지지하나,

‘지금 모든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사업비 및 공모사업지원금을 국민 1인당 지급하면 월 1백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10여 년 넘게 간혹 회자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하여 진행한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그 정권이 끝나면, 축소된 후, 이름과 절차와 범위만 변경되어 다른 정권,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을 될지언정,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개선이 더딘 점에 대해 ‘왜? 그럴까’라는 고민해 본다.

3. 마을만들기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그리고 도시재생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균형성장으로 발전하기를

2021년 6월 필자는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정책 포럼에서 ‘차기 정부 이후부터는 20년~30년 단위의 장기적인 융합정책’으로서 ‘균형성장 기반의 균형발전 정책’이 모든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나아갈 수뿐이 없으며, 이는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도 성장이 필요하고, 서울시 도봉구도 성장이 필요하며 각각의 24개 자치구의 성장을 기본으로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의 성장과 비수도권의 성장’, ‘대도시의 성장과 중·소도시의 성장’ 등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권역 혹은 광역, 그리고 국가 단위의 균형성장을 통해서만 현재의 행사와 지원금 지원 수준의 균형발전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통한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정책 제안을 했고, 이후 LH공사는 우연하게도 21년 하반기에 ‘균형발전본부’를 개편한 적이 있다(실제 사업 진행은 확인 못함.)

따라서

- ① 대통령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국가 단위 균형발전을 위한 각 권역·광역·기초단위의 균형성장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안·수립하고 단기적인 정책을 넘어 단기·중기·장기 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 ② 각 중앙부처는 개별적 부처별 ‘마을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및 관련 사업’ 등을 각 단계별로 연계하여 일시적인 1년~5년 단위 지원의 현 방식을, 단기(1년~5년)·중기(6년~10년)·장기(11년~20년)의 연속적인 지원정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예시적 방법으로는

- 공동체 형성 등의 기초는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영역
- 지역공동체 경제와 도시재생 경제 분야는 사회적경제 영역
- 복지·돌봄·창업·평생학습·지역 자산화, 지역 금융 등은 관련 영역과 시장경제와의 협업 지원
-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차세대기술·전문직 고용 등의 경우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전문영역이 아니기에 지역 및 전문·시장경제 기업의 지원

등을 통해 1년~5년 단위의 정책 실효성이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규모와 금액과 인력의 단기 지원’을 넘어 단기/중기/장기 단위의 마을 단위·지역단위, 부문 단위, 광역 단위, 국가 단위의 현 정권, 차기 정권 기간인 5년~10년을 넘는 정권 확보와 정당의 가치를 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보다 혁신적이고,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대한민국 모든 마을과 모든 지역과 모든 기초지자체의 활동과 협업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현 기준 5년 단위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이, 10년, 20년 이상의 혁신적인 융합 장기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III. 결론 : 20년을 지속하는 ‘균형성장’과 ‘균형발전’의 대한민국

‘우리가 바라는 평등’은 모두에게 조건 없는 ‘평등’이 아닐 것이다.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대가와 가치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한 이웃과 주변에 대한 ‘돌봄·복지’ 등의 기본적인 ‘삶’을 공유하자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배분이 아닌, ‘함께 각자의 재능·노력·가치’ 등을 지역과 마을에 나누고, 그러한 공동의 행위를 지속하며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마을 단위, 지역단위 일자리와 경제’가 시작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각 마을과 지역의 특성과 인적·물적·환경적 자원을 통한 ‘공동체 경제를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가 함께 지원·성장’하는 것이다.

이후 자연적으로 주거·돌봄·의료·물리적 환경·교육·사회복지 등의 순환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가치가 마을 단위로, 지역단위로 확산하며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해소’,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융합을 통한 시장 확대를 통한 상생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

지속 확대’, ‘의료·돌봄·평생학습을 통한 주거와 복지의 향상으로 결혼, 인구 증가, 지역 의료, 돌봄 업체 증가, 소규모 수준 이상의 일정 수준 단위의 기본적 삶과 문화를 누리는 기본사회’로의 순환적인, 단기·중기·장기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해 본다.

25년 동안 한 마을에서 200여 명의 주민과 활동하면서 ‘마을만들기 -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이 함께 융합해야만 마을이던, 지역이던, 국가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함을 배웠고, 이를 넘어 ‘진정한 기본사회’의 실현은 현재와 같은 단기(1년~5년 단위 정책 종료 후 99%가 다음 정권/정부에서 다른 이름과 다른 수준의 지원으로 또 5년 정도 지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개인적 기준으로 판단하였음)를 넘어, 진정한 성과와 실효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지원사업 완료/마무리 지역에서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인구 및 지역변화) 가능성이 존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는 중기(2단계 사업으로 6년~10년 단위로 기존의 기초적인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경제조직 구축 수준을 향후 기간에 실제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서의 성장지원) 단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장기(3단계 사업으로 11년~20년 단위로 전문적 지역경제와 일자리, 지역공동체 운영 주체로 성장지원)이라는 보다 확대된 ‘각 지역의 균형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모두가 누리는 균형발전 20년’의 정책이 실행된다며,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역’,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중심의 지역’,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도시재생 기반의 도시 정비·개발을 통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주민조직의 활성화’ 등이 20년 이상의 장기지속 정책을 펼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기본소득사회’의 근간인 ‘사회적경제 중심의 공동체가 지역에서 마을에서 기본소득 마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해 본다.

결론은 기술한 모든 정책과 사업, 그리고 공동체·사회적경제·도시재생·사회문제 등은 ‘인구변화’를 기준으로 각 단위·분양·부처 정책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융합하고, 그것을 단기·중기·장기 정책으로 구상하고 실행하기를 희망해 본다.

- 25년 차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활동가 안정희 주관적 의견 -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제안

윤요왕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제안

윤요왕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분절화된 경제정책과 도시전환의 통합적 사고와 거버넌스 필요

- 지역과소화, 자원의 부재, 지방재정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지방)경제의 문제와 지방분권,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회혁신,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영역의 통합적 사고**를 통해 사회문제와 도시전환을 위한 해결 모색

예) 2022년 행안부 주민자치 대상 수상(춘천 퇴계동) 사례

- ‘새삼스런 벤치’: 코로나 시기 배달음식의 급증으로 인한 1회용 배달음식용기 등을 수거해 벤치로 재활용한 사업. 이를 위해 춘천사회혁신센터/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와 사회적기업 그리고 퇴계동사무소/퇴계주민자치회/통장협의회와 자생단체 등이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진행

항목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지역사회혁신/사회적경제
활동주체의 정체성	주거지(마을) 기반	사회문제 당사자 기반
활동의 방향	마을의 평안한 생활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의 영역	일상생활의 문제와 필요	마을, 지역, 국가, 전지구적
활동의 주요 원칙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새로운 해결방법 모색
주요 협력자	행정, 마을단위 공동체	공공, 기업, 시민사회, 대학 등
주요 가치	공동체성의 확장	다양한 이해당사자 거버넌스
협력방법	공동체의 가치를 확장하는 연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연대
핵심 역량	마을의 가치와 자원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조직의 역량

□ 정책과 지원의 지속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

- 정치지형에 따라 장기간 지속해야만 하는 정책사업들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변화에 따라 **정책사업의 축소,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그 효과와 성과가 단절되고 의미가 없어짐.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

- 국가의 정책사업을 실행할 경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 정부지원 이후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예산, 조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계획단계부터 선정과정, 정부지원 기간동안 사후운영에 대해 철저히 계획, 관리가 필요함

예) 주민자치, 사회혁신, 문화도시,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장기적인 운영과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정책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정책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축소, 폐기됨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효능감이 떨어짐

□ 청년들의 Gap Year와 사회적경제, Local 로의 접근에 대한 정책

-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취창업과 진로 그리고 상담, 멘토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심과 전환**을 지원(청년 Gap Year 기본소득 연계)함으로써 자기와 관계에 대한 질문, 새로운 영역(로컬, 사회적경제영역 등)에 대한 경험 등을 지원하는 정책

- 2024년 일할 능력은 있지만 **쉬고있는 청년 42만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2023년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 **54만명** 추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 32.2%**. 번아웃의 배경은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 **덴마크 애프터스콜레/플케호이스콜레** : 14~17세/17.5세 이상 청소년/청년들의 진로와 인생전환 학교
- **독일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 (Freiwilliges Soziales Jahr, FSJ) : 16~27세의 청소년들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돌봄 기관, 박물관 등 주요 사회공익시설에 참여하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 청년들이 1년 이상 3년 이하로 관광자원 기획이나 개발, 고령자 생활지원, 빈집과 빈점포와 같은 공간의 활용 대책, 이주자 지원 등의 '지역부흥' 활동

* 한국형 '갭이어'(gap year) 도입, 청년기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읍면동 자치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으로 도시(마을)전환과 사회문제 해결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지역과소화, 고령화, 교육과 돌봄, 사회적경제, 민주와 자치의 문제를 **읍면동 단위의 작은자치**를 통해 주민(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농촌의 경우 정부중심의 성장과 개발은 도시집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작은마을단위 자치와 경제적 연대,협동**으로 지역사회의 민주적 자치와 협동을 도모함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전환 도모

(예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읍·면 자치 시범 실시 (법 개정)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읍·면자치의 보편적 실시
 - 주민들의 읍·면 단위 조례·규칙·정책 발안권과 결정권(주민투표로) 보장(**주민조례발안법 개정**)
 - 읍·면 단위 예산권 및 계획권 보장(국토및도시계획법 생활권 계획을 읍·면계획으로 개정)
- **읍·면 교육자치제 강화**(법률, 조례) : (준)교육자치 도입
 - 읍·면에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마을학교, 농촌유학 등에 관한 지원 사무를 배분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주민자치회 등 주민조직과 협력하여 운영

□ 통합돌봄의 문제해결을 위한 거점공간과 주체 활동가 지원 정책

- 그동안 돌봄의 문제는 복지관 중심으로 또 돌봄영역의 분절화로 인해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그 수요와 서비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 마을단위, 생활권단위에서의 돌봄은 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삶의 전영역에서 돌봄의 통합점이 필요해짐
- 포괄적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는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농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주체형성은 잘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거점공간과 주체(마을주민+외부 전문가/활동가)의 형성과 지원, 활동의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 마련

예) 춘천시 고탄리 별빛마을 : 방과후돌봄, 농촌유학, 노인돌봄 ‘우리마을 119’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지역경제·도시재생

다같이 잘사는 기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주최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